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과거 민주당이 선거에 패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민주당 으로서는 선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자기변명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정당 지지율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보수·중도·진보 이념성을 말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은 사회가 보수화되었다는 의미다. 결국 민주당 으로서는 개혁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진보가 소수라서 선거에 졌다는, 달리 말해 패배의 탓을 국민에게 돌리는 논리였다. 그러나 보수로 기울어졌던 이념의 운동장이 박근혜 정부 탄핵을 거치면서 다시 진보 우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보수 정당에서 반대 논리로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자신들의 선거 패배를 변명하기도 했다.

그럼 왜 정치 이념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는가? 우선 이념 지표, 정당 지표, 지지율·득표율을 나무에 비교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이념

대선,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지표는 뿌리, 정당지표는 줄기, 지지율이나 득표율은 과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튼튼하게 작근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록 영양분을 아무리 공급해도 수확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줄기도 마찬가지다. 줄기가 튼튼해야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하고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여론에서 진보·보수 구도에서 밀리면 정당 지지율도 밀리고 후보 지지율 또는 선거 득표율도 밀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보수 우위였다. 그러나 87체제 이후 차츰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룬다. 90년대 한길리서치 이념 조사에 의하면 보수·진보가 25%~30%, 중도가 25%내외로 보수·진보 간 5%p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항상 대선에서 보수 진보 진영 간 경쟁은 박빙이었다. 그래서 이 무렵 이념의 구도를 국민이 만들어 준 '황금 비율'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진보 간 균형은 노무현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 우위가 된다.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탄핵 때부터 2020년까지는 반대로 진보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이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진보 간 격차는 10%p 정도로 선거에서 극복하기 어려울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또 바뀌었다. 올해 들어서면서 이념 지표가 다시 균형을 잡아 가기 시작하고 있다. 2020

년 12월 보수(21.0%)와 진보(31.1%) 간 격차는 진보 10.1%p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와 국회의원 당대표 경선을 거친 이후 2021년 8월 현재는 보수(27.2%)와 진보(30.4%) 간 격차가 3.2%p로 오차범위 내 큰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다시 말해 운동장 논리로 말하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40대 이상이 중심이 된 이념의 전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그 대결도 가장 치열한 최후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니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을 잘할 후보가 아니라 이번 대결에서 이길 후보, 그리고 이겨서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만큼 감정이 격하고 치열한 대선이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 어느 쪽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 즉 진보와 보수 진영이 아무리 강하게 서로 충돌하고 이념적 지지층이 다 결집해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은 역대 선거에서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중도층이 선거를 결정할 것이다. 단 이전과 다른 것은 전통적 중도층에 더해 탈이념의 2030세대까지 비슷한 표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간단하다. 중도층과 2030의 표심을 잡은 쪽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패한 쪽은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며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민심을 못 읽은 자신들을 탓해야 한다.

종교칼럼

새로운 생의 우렁찬 합성 소리



최현열 광주우교회 담임목사

올해는 유독 매미 소리가 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 여럿이 모이기도 힘들어졌고 약자지컬하며 자유롭게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맴맴거리는 소리는 더욱 크게만 들린다. 주변이 조용한 탓이기도 하고 내가 예민해진 탓인지도 모르겠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보통 70-80데시벨 정도이고 이런 소음은 매우 시끄러운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과 같은 정도이다. 청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 하니 나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 내 탓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네 마음과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는 매미들이 한편으로는 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다.

저들의 생을 살펴보면 알이 부화하는데 일 년, 땅 속에서 나무 수액을 먹으며 지내는 애벌레 기간은 오 년에서 칠 년 정도이고 탈피를 해서 여름 한철 우는 기간이 한 달 정도인데 그럼 과연 매미들의 진짜 생은 무엇일까? 가장 긴 시간을 보낸 애벌레 기간일까, 성체가 되어서 지낸 한 달일까. 옛사람들은 매미를 청렴하고

떡이 많은 곤충으로 여겼다고 한다. 중국 진나라 시인 육운이라는 사람은 매미가 다섯 가지 덕을 갖췄다고 했다. 끈게 뻗은 긴 입이 선비의 갓끈 같다고 해서 문(文), 이슬과 수액만을 먹어 맑다고 해서 청(淸), 곡식·과일을 해치지 않아 염치가 있다 하여 염(廉), 제 살 집조차 없이 검소하다고 해 검(儉), 오고 갈 때를 안다고 해 신(信)이라고 했다고 하니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땅속에서 견디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매미처럼 언젠가는 세상에 나가 뜻을 펼칠 날을 꿈꾸었던 이들에게는 좋은 귀감이 되었으리라.

또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매미의 수명은 종에 따라 7년, 13년, 17년이라고 한다. 수학적으로 소수 해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실로 미물의 생에서도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짝짓기 후 수컷은 죽고 암컷은 알을 낳은 후에 죽는다. 그렇게 물어대는 것은 수컷인데, 어느 정도 기온이 높아야만 소리를 낼 수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열을 받아야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재미있는 사실이다. 기온이 낮거나 비가 와서 충분히 몸에 열을 받을 수 없으면 울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긴 시간을 보낸 애벌레 때에 비해 성충이 되면 몇 진 몸체도 갖추게 되어 자유로이 날 수도 있고 사랑을 찾아 노래 할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누며 알을 낳아 그 목적인 바를 달성하니 짧은 성충의 생이지만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기독교인의 생애에 있어 매미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은 매미는 땅속에서 지내는 애벌레 시기에 비해 성체의 생이 짧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이후가 영원이라 표현할 정도이니 비교할 수조차 없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한다. 매미에게도 새로운 삶이 펼쳐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삶이 있다고 말씀한다. 땅속에서 지내던 애벌레의 삶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날개를 펼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 나은 때가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애벌레의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성충의 화려한 삶도 있듯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둡고 냉혹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인고의 삶은 우리를 반드시 성장하게 하며 성숙하게 이끌 것이라 여긴다. 힘들지만 다같이 조금만 더 인내해 보자.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기 전 잠깐 멈춤의 시간인 번데기 때가 있듯이 우리의 잠깐 멈춤이 더 나은 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열을 받아야 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우리도 분이 올라 오고 짜증이 생겨 소리를 치고 싶겠지만, 매미가 사랑을 찾아 우렁찬 소리를 발하듯이 기독교인의 삶도 그렇다. 우리 삶 속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한 노래를, 고통 속에 아우성치는 이들을 위로해 주는 노래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열정을 북돋우는 노래를 크게 불러 보자. 이것이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삶에 노래할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社說

도심 질주 오토바이 굉음 단속 기준치 낮춰야

오토바이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토바이 배달 수요가 늘면서 굉음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특히 광주시 민원 게시판에는 밤늦게까지 아파트 단지를 누비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단속 요구가 자주 올라온다. 울머어 7월까지 광주시 5개 구청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모두 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 배 넘게 급증했다.

민원 급증에 따라 광주경찰청과 광주서구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 굉음 단속이 쉽지 않다는 현실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며칠 전 합동 단속반이 1시간 30분 가량 오토바이 54대를 적발하긴 했지만 이중 굉음으로 적발된 것은 한 건에 불과했다.

이들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적발해

소음을 측정하더라도 대부분 아슬아슬하게 기준치를 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음 측정 기준치가 너무 낮은 것이다. 현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는 105dB(데시벨)로 웬만한 굉음 오토바이도 단속을 할 수가 없다. 기차가 철로를 달릴 때 선로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수준의 소음이 100dB인 것을 감안하면 단속 기준치인 105dB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기준치인지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고 있어 배달 오토바이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 블루'에 지친 시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으로 밤잠까지 설치쳐야 되겠는가. 가능한 빨리 현실성 없는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치를 낮추는 것만이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이원화 돼 있는 단속 기관을 일원화 하는 것도 시급하다. 소음측정기도 없는 경찰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구정이 하는 현실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 성과 너무 더디다

계엄군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주남마을 인근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이 모두 네 건에 달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폭탄을 장착한 무장 전투기 출격 대기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규명위)는 엿그제 '2021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를 내고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인근에서만 네 차례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밝혀진 주남마을 마이크로버스 총격 외에 지원동 버스 중점 부근 앵블런스 피격, 화순(광주) 너릿재 민간인 사살, 주남마을 계엄군 주둔지 민간인 사망 사건 등 세 건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5·18 당시 공군제1전투비행단에서 '항공기에 맥시 로딩(최대 무장장착)하라'는 명령을 받고 750파운드 공대지 폭탄을 F-86 항공기 양쪽 날개에 두 발씩 모두 네 발을 장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5·

18 진상규명위는 또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기간(1980년 5월 18일-27일), 계엄군의 총칼에 숨진 민간인을 167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향후 공식 통계자료로 활용돼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희생자 통계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빚어졌던 혼선을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5·18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문헌·대면조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 직권조사하기로 했던 최초 발표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활발한 조사가 이뤄지지 어려웠으리라는 점을 심층 이해하지만,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5월 진상 규명은 진상규명위원회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되새기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슬우화 '허풍선이'는 해외여행을 하고 고향에 돌아온 어느 남자의 이야기다. 주인공은 그리스의 로도스 섬에서 열린 멀리뛰기 경기에서 자신이 올림픽 우승자들도 해내지 못한 기록을 냈다고 허풍을 떠다. 사람들이 믿지 않자 그는 "로도스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그러자 누군가 말했다. "이보시오. 그럴 것 없이 여기가 로도스라 생각하고 뛰어 보면 될 것 아니겠소?"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이 말은 많은 철학자들이 그들의 책에서 인용하기도 한

유명한 대사다. 특히 헤겔은 '법철학강의 서문'에서 현재성과 현상성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 "행동하지 않는 이론은 의미가 없으니 지금 있는 곳에서 실천하라."

도쿄올림픽에서 2연패를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한국 야구팀이 여섯 팀 중 4위에 그치면서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슬우화 허풍선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약재가 겹겹하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하기는커녕 분노만 키웠다.

전력 약화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기술적인 문제다. 한국 프로야구는 '타고투자'가 뚜렷하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투고타자'와는 정반대 현상. 우리 선수들의 타율이 높은 것은 타자들의 기술력보다는 투수력의 약화에 그 원인이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과 2009년 WBC 준우승 이후 우리 투수들의 기량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강속구 전장'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시속 100마일(160km)이 넘는 공에 대처하기 위해 '플라이볼 혁명'을 말할 때, KBO리그 타자들은 '우물 안 개구리'로 안주했다. 그 결과 160

km대의 빠른 공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니 올림픽에서 우리 타자들은 상대팀의 빠른 공에 속수무책이었다.

LA 다저스 투수 커쇼는 "스피드의 증가는 게임의 진화다"라고 했다. 선수들은 갈수록 커지고, 강해지고, 빨라지고 있다. 한국 야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오늘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상황은 내일도 마찬가지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기 고

후보님, '지방 활성화 정책'은 없나요?

보인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헌법적 가치다. 국토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균형 발전이며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다.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토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9년 12월 기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고, 1000대 기업 분사 중 73.6%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신용 카드 결제액의 81%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50%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다. 이쯤 되면 수도권 집중화,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다.

지방 도시는 알게 모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지만 대책은 묘연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 지방대학 지원 정책, 혁신도시 건설 등의 지방 정책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내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중단되고 오히려 수도권 규제 정책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표방하지만 지방정부의 눈과 귀는 언제나 중앙정부의 각 부처를 향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처리하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지방의 재

원과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모든 대권 후보들께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현재 중앙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일정 비율 매칭한다. 평균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이다. 이러한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해 보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를 비롯하여 20~30만 명의 중소 도시, 4만~5만 명인 군 단위로까지 다양하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또한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재정이 다소 여유로운 자치단체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지방정부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아슬게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주민의 권리 확대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1월 시행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지방자치와 국토 균형 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방도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기를 기대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